

일가정양립의 생활화와 저출산

수행과제명 :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과제책임자 : 김혜영 선임연구위원 Tel : 02-3156-7139, e-mail : khyoung222@kwidimail.re.kr

요 약

한국사회의 경우 평균혼인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출산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되는 미혼여성의 비혼 사유 및 가족의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향후 저출산 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출산 정책은 비단 인구정책의 차원을 넘어 취약가족지원정책에서부터 모든 남녀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인프라의 구축 및 확대와 같은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결과 결혼이나 자녀출산으로 인한 취업이나 구직활동 등의 중단을 경험한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에게 직업활동과 자녀출산 및 양육을 양자택일적인 선택으로 귀착시키는 사회환경요인의 제거는 매우 주요한 저출산 해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자녀 기혼여성에 대한 직장차별과 관련된 미·기혼여성들의 높은 동의도와 미혼여성들 가운데 결혼과 함께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따라서 일가정양립 가능한 직장환경의 조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정책의 추진방향

- ① 일가정양립제도의 지속적 확대와 이용률 제고방안 마련: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 회복을 위해 여성의 지위향상과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로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일상화에 맞추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부문과 정규직 중심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대다수 여성의 일자리가 단시간,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실제적인 정책의 수혜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 ② 유자녀 기혼여성에게 불리한 기업의 고용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 대다수 미혼여성들은 그들의 직장여건이 기혼여성으로 생활하기에는 여전히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요소가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혼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 ③ 결혼 및 출산 등 가족생활을 배려하는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강한 자녀중심주의와 책임성을 내재화한 여성일수록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나고는 있으나, 실제 기혼여성들의 경우에는 이같은 책임성이 높은 경우에 오히려 출산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치관이 높은 여성들의 경우, 결혼 및 출산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결혼 후에는 상당한 돌봄 부담으로 다가오는 양가적 형태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명 및 출산의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함께 지역과 사회가 함께 돌보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통해 출산율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④ 가족형성기 결혼 준비 및 주택마련 자금 지원방안
결혼적령기를 넘긴 미혼여성들이 선호하는 결혼지원 정책으로 결혼준비

를 위한 유급 휴가제도나 신혼부부 주택마련 지원, 결혼자금 융자, 직장-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및 가족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결혼기회 제공관련 정책보다는 보다 직접적인 유인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같은 정책지원은 공공부문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민간기업 등 직장단위로 직원복지 차원에서 적극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정책효과

- 결혼유인 동기 강화를 통한 출산을 제고
- 일가정양립기반 확산을 통한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 결혼 및 출산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보건복지부(저출산정책과)
▶ 관계부처 : 고용노동부(고용평등과)
